

국가지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최재호**·이영학***

1. 머리말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의미와 기능
 - 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의미
 -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기능 및 지정
3.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운용현황
 - 1)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제공 현황
 - 2)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활용현황
 - 3)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효과
4.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제언
 - 1) 국가지정기록물 선정 대상 및 과정의 다원화
 - 2)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지원 지향
5. 맺음말

* 본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연구」(2015)를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사(주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교신저자).

▪투고일 : 2015년 12월 19일 ▪최초심사일 :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30일.

[국문초록]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장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국가지정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 민간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

1. 머리말

한국근현대사의 굴곡된 역정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훼손·폐기되거나 유실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역사적 기록물들이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소산·관리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근현대의 역사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만으로는 규명해낼 수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기록물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전반의 역사연구에 있어서 가치가 있으나 그것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은 그 일부분이며,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을 보완한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 증거 할 수 없는 많은 사실을 담아내고 있다.¹⁾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국가기록물 지정이라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구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가능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었지만 유출되거나 소실된 기록물 즉, 공공영역의 결락된 역사보완에 목적을 둔 제한적인 제도였다.

정부는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현 기록물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보완하였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략)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중략)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²⁾고 규정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변동사항 관리와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³⁾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역사적 가치를 지녔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놓인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정보화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1) 채수인, 「민간기록물 수집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0쪽.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제43조 1항.

3) 위와 같음.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법령에 의해 2008년부터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이승만대통령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고, 시기가 내려오면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도산안창호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김영훈 진료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 등 2014년까지 11건의 기록물이 지정되었다.((표 1) 참조)

이 글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지정기록물’을 운용해온 지정 제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그것의 소장기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의미와 기능

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의미

민간기록은 사전적으로는 비(非)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으로 정의된다.⁴⁾ 현 기록물관리법에서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록은 대부분 일정한 형식이나 규격을 갖고 만들어지고, 민간기록은 특정한 형식이나

4)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111쪽.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⁵⁾ 민간기록물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공공기관의 업무활동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 다양한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수집한 기록물, 민간 소장 기록물로 구분 될 수 있다.⁶⁾ 민간소장기록물은 민간에서 사적·공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 순수 민간기록물, 공공영역의 관련 업무로 인해 정상적으로 민간에 접수·축적된 공공기록물, 부당한 사유로 민간에 유출·수집되어 회수되어야할 공공기록물로 구분될 수 있다.⁷⁾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생산되어 활용되는 시점에서 양 영역을 오갔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 기록물의 의미는 상징하는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의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 내용은 행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지만 맥락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⁸⁾ 민간기록물은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기록을 만드는 복잡한 동기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맥락으로 인해 중요한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만으로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거나 파악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한국 근·현대사는 격변기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관리·보존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근현대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은 파편적으로 흩어지거나 그 일부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사회의 여러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

5)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선인, 2008, 511쪽.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지정대상 조사』, 2007, 16쪽.

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위의 글, 17쪽.

8) 최광호,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위 반영성·커뮤니케이션적 특성·상징성·시간성」,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35쪽.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호될만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녔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놓인 민간 기록물을 보존하고 지식정보화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제도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 중에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의 필요가 공인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민간기록물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국가가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에는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해당 기록물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과는 연결된다. 기록물의 관리·보존의 목적은 활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활용이 없는 보존은 오히려 기록물 보존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민간기록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이유를 단순히 관리·보존으로 두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활용을 통한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증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기능 및 지정

현 기록물관리법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목표는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정보화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기록물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필요한 예산 지원, 위탁 보존 등 민간기록물 소장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⁹⁾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

도의 기능은 크게는 지정 및 해제, 관리로 나눌 수 있다.

현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후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기 위해 홍보와 학술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정 대상이 되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를 파악했으며 실제 지정이 결정되기 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8년에 ‘유진오의 대한민국 제헌헌법초고’,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문서’와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2008년 4건의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이후, 지정기록물에 대한 보존 지원과 실태점검만 이루어져 오다가, 2011년에 들어와 ‘중요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관리 강화’라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취지를 이어가고자 신규 지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지정기록물로 총 7건을 신청 받았지만,¹⁰⁾ 최종적으로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2012년에는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전시관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는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전시 기록물은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시절 문서’,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안창호 미주 국민회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 이었다. 처음으로 민간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였다.¹¹⁾

2013년에는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이 3-1호로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심소 김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이렇게 총 5건이 지정되었다. 2014년에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기록’이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은 총 14건, 호수

9) 남경희, 「국가지정기록물의 수집 관리 전략」,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14쪽.

10)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1, 175쪽.

1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12, 278쪽.

로는 11호까지 지정되었다. 지정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2011년까지는 정치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3년부터는 의학, 인권, 종교, 예술, 경제 등으로 지정된 기록물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표 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현황

지정	지정년도	기록물제목	소장기관	수량
제1호	2008년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1점
제2호	2008년	인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90점
제3호	2008년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15만쪽
제3-1호	2013년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19,000매
제4호	2008년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한글학회(12), 독립기념관(5)	17권
제5호	2011년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도산안창호기념관	17,000건
제6호	2011년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새마을운동중앙회	3,015권
제7호	2013년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 박물관	955권
제8호	2013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3,060점
제8-1호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940점
제8-2호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김선현	125점
제9호	2013년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김정선(상주 동학교당)	1,425점
제10호	2013년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2,400점
제11호	2014년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75점

3.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운용현황

본 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해당 기록물의 정보제공 여부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민간기록물 소장처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학술단체,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 중 독립기념관을 제외한 10개의 소장처¹²⁾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조사, 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¹³⁾, 현장 방문, 문헌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담당자 인터뷰는 각 소장처별로 담당자에게 30분에서 1시간씩 1~2회 진행하였다.

1)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제공 현황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¹⁴⁾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서는 제헌헌법초고,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문서,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도산 안창호의 미주 국민회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주로 해당 민간기록물에 대한 개괄 설명, 기록물과 연관된 인물소개 또는 해당 운동 소개, 관련 기록물 사진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

12)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 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기관 내부 지침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의 경우, 담당학사가 담당자 설문조사에는 응하였으나 내부지침으로 담당자 인터뷰는 불가하였다.

13) 설문조사는 사전에 소장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설문조사 가능 유무를 확인한 뒤 메일로 보내 설문작성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소장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록물(국가지정기록물 포함) 정보화 현황(디지털화 정도, 정보화 목적 등), 서비스 현황(정보서비스 유무 및 유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 이용 증가 정도 등), 향후 계획(정보서비스 개선방향, 지원필요 영역 등), 국가지정기록물지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진행한 설문조사, 사전 문헌조사, 소장처 현장답사 등을 기반으로 추가 질문과 응답으로 진행하였다.

14) <http://theme.archives.go.kr/next/onlineGallery/viewMain.do>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는 과거에 진행했던 전시를 온라인으로 재구성한 콘텐츠로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링크로 제공하고 있는 소장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및 소장 기록물관련 기록정보서비스를 정리해 보았다. 기록정보서비스는 DB검색, 원문 제공, 전시설명, 소장기록물 설명, 기록정보콘텐츠¹⁵⁾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소장처	전시안내 및 설명	DB검색 제공	원문 제공	소장기록 소개	기록정보 콘텐츠
고려대학교 기록자료실	○	○	×	○	×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비 전시기관)	×	○	○	×
한글학회	(비 전시기관)	×	×	×	×
도산안창호기념관	○	×	×	×	×
새마을운동중앙회	○	○	○	○	○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	○	×	×	×	×
사단법인인 나눔의 집	○	×	×	×	×
김정선(상주 동학교당)	×	×	×	×	×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	(비 전시기관)	○	×	○	×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	×	×	○	×

현황조사를 보면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각 소장처마다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것은 각 소장처의 비전이나 활용역량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김미연,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콘텐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2쪽. 기록정보콘텐츠란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기록정보를 주제에 따라 컬렉션화하고 주제에 관한 추가정보와 함께 가공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소장처는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기록정보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춤문화자료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같이 이용자에게 검색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승만 연구원처럼 기록물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홍보하면서 강조한 내용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 원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지식정보화가 있다. 하지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장처는 많지 않았다.

둘째,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소장처 홈페이지 링크 외에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정보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DB¹⁶⁾에서 일부 서비스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 홈페이지가 아닌 타 기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지정기록물의 내용 또는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링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해당 소장처 사이트 링크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다.¹⁷⁾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민간기록물에 대한 대중의 인지가 없다면 지정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은 미진하다.

16) <http://jisik.kiom.re.kr/>

17) 유진오 제헌헌법초고와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의 경우 소장처 사이트가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존·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 학예사는 인터뷰에서 유진오 제헌헌법초고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링크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로 연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활용현황

(1)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¹⁸⁾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기록정보서비스로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검색 서비스, 학술연구제공, 전시, 주제관련 출판물 진행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에서는 2008년 7월 16일부터 동년 8월 15일까지 헌법제정 60주년을 기념하여 ‘현민 유진오 특별전 법으로 세상을 그리다’¹⁹⁾라는 특별전을 진행하였다. 특별전에서는 남조선과도정부산하 법전편찬위원회에 참여했던 유진오가 작성한 헌법의 초안과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헌법의 제정과정과 한국 20세기 초 중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의 제헌헌법초고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담당 학예사는 인터뷰에서 방문자들이 제헌헌법초고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며 소장처 측에서 지정 사실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시회는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에서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하여 진행된 유일한 전시회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 상설전시실 기증자코너에서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안 사본이 기증기록물로 전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소장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다. 제헌헌법초고와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는 제목과 간략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대학 자체 연구

18)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2004년 박물관 소속으로 설치인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조직으로 되어있다. 제헌헌법초고와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는 기록자료실에서 관리 및 보존하고 있다.

19) http://archives.korea.ac.kr/cybr/exbt/plan/plan_06.jsp

와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헌헌법 초고,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는 디지털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고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제헌헌법초고,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의 영인본과 해제를 포함해 자료집 출판 작업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에서는 이 자료집을 통해 기록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추가 기록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국가지정기록물의 추후 활용계획은 없다고 한다.

자료집 발간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 방문 및 열람 빈도는 많지 않다고 한다.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안은 1년에 3~4회 정도 여러 기관에서 대여전시 요청이 들어와 사본을 대여해준다고 한다.

(2)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²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이승만의 인물 및 사상 연구, 연구자들을 위한 이승만 기록물 제공,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이승만 기록물 정보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록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문서류와 사진류는 일부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1997년에 현대한국학연구소에 이관된 이승만 기록물은 정리를 통하여 일 년 뒤에 출간이 되었다. 총 18편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이것은 이관된 기록물의 20%정도에 불과하다.²¹⁾

2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현대한국학연구소에 소속된 조직이었으나 2010년에 현대한국학연구소에서 이승만문서와 이승만연구기금을 분리하여 우남관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고 2011년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 김혜림,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정보기록학 석사학위논문, 2010, 74쪽.

이승만 기록물은 크게 대한민국 건국 이전(1949년 8월)과 이후로 구분된다. 건국 이후 문서는 대통령 재임기 문서로서 대부분 영문이며 모든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및 PDF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건국 이전 기록물은 다시 동문(東文: 국문, 한문, 국한문)과 서문(西文: 영문, 불문)으로 구분된다. 건국 이전 동문은 영인본, 마이크로필름, PDF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건국 이전 서문 중 전보와 편지는 영인본으로 공개되었고, 나머지 기록물 또한 영인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책의 출판과 동시에 해당 기록물 또한 공개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은 약 1만 9천 여 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전쟁 및 군사(軍史) 관련 중요 사진 약 1천 장은 2011년 12월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동으로 출판한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과 이승만대통령』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포함된 사진들은 2012년 9월부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사본 PDF 열람과 인쇄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부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사진원본 기록물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사본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가 정리되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진의 전자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동시에 해당 ‘사진원본’은 모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제공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우남사료실에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시기 기록물 사본을 비치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20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독립운동, 제1공화국 등에 관련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을 직접 방문한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전문 이승만 연구기관으로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연구자로 집중되어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연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기관의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에서는 이승만 연구의 확장,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만 기록물 전량 디지털화를 마무리하고 원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한글학회

한글학회에서는 조선말큰사전 17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중 5권은 독립기념관의 요청으로 그 기관에 기증하였다.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를 열람하기 위해 한글학회를 연 10회 정도 방문한다고 한다.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후 언론사에서 한글학회 방문 및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열람요청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글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출간한 학술지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지정기록물인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2년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특별전시를 진행하면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디지털본은 한글학회가 소장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소장 이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소장을 보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글학회는 사전, 학술지, 학회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말큰사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전원고 자체보다는 이를 출간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환경과 이야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4) 도산안창호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는 도산 안창호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17,000건 소장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소장기록물의 기록정보서비스는 학술연구제공, 전시, 출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기록물은 독립기념관에서 사본으로 제작한 것들이며,²²⁾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안창호 기록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담당 학예사는 인터뷰에서 대해 안창호관련 미주 기록물 중에 일반인들의 이목을 끌만한 전시를 구성하기위해 사진 기록물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산안창호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창호 미주 기록물은 엄밀히 말하면 「도산 안창호 관련 기록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생산한 문서가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여러 기관과 인물의 자료들이 함께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²³⁾ 그리고 소장 기록물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와 조직, 다수의 인물 관련 자료 등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 개별 자료로서 정확히 분류되거나 분석되지 못한 것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²⁴⁾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기록물에서 안창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는 웹을 통해 일반에 검색, 콘텐츠, 온라인 전

22) 담당 학예사는 인터뷰에서 안창호의 부인인 이해련 여사는 자녀들에게 안창호의 기록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던 장녀 안수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창호의 기록물을 도산안창호기념관에 기증하려고 했으나 당시 도산안창호기념관이 건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독립기념관에 대신 기증하였고 도산안창호기념관은 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전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3) 박결순, 「국가지정기록물로서 도산 안창호 관련 자료의 역사적 가치」, 『기록인』 17호, 국가기록원, 2011, 103쪽.

24) 박결순, 위의 글, 104쪽.

시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안창호 미주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지원으로 목록작업,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지원 중단과 도산안창호기념관 예산의 한계로 소장기록물의 80% 정도 완료되었다.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는 등록문화재 등재 추진과 예산지원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5)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기록물 3,015권을 보존·활용하고 있다. 새마을 역사관²⁵⁾에서는 새마을 운동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새마을 운동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전시관에는 당시 새마을 운동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새마을지도자 관련 기록물, 교육자료, 새마을운동 총서, 시청각 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 운동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새마을 운동 기록물 DB구축 사업은 새마을운동 기록물 원문 DB구축 사업과 자료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마을 중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1970년부터 1979년도까지의 새마을 운동 기록물 보존처리, DB구축, 목록화가 완료되었다. 현재 새마을운동 기록관²⁶⁾(DB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서비

25) 새마을 역사관은 1983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건립되었다. 새마을 역사관은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들을 전시한 자료관과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 역사관에 자료 수장고를 두어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26) <http://www.saemauldb.com/>

스27)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 기록물 DB구축을 통해 새마을운동 변천과정 기록물을 재정리하고, 새마을 운동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새마을운동 기록관 메인화면 및 구축내용소개



새마을운동 기록관은 새마을중앙연수원의 새마을역사관, 연구자료실 등에 소장중인 새마을운동 관련 일반문서류, 시청각류, 도서류(간행물 포함), 박물관류 등 약 14,000여 종 20,000여 점에 대한 기록물 정보를 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 운동 기록관을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검색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검색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새마을 홍보관을 통해 새마을 운동 홍보 미디어, 지역 지도자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 기록관을 통해 새마을 운동 홍보와 연구에 큰 효과가 있다가 보고 있다.

새마을 운동 교육 강사들은 새마을 운동 기록물을 국내 및 외국 수강생들에게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27)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검색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도서관 정보화 파트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있다.²⁸⁾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소장기록물만으로는 사회상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새마을 운동 기록물의 개발도상국 언어번역 작업, 과거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은 마을지도자들이 남긴 기록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6)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에서는 김영훈 진료기록물 목록 작업을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2만 여장의 이미지파일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연구목적으로 디지털화된 김영훈의 진료기록물 중 진료기록부 원문을 엑셀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훈 진료기록물의 보존과 연구진행을 위해 마이크로 필름 수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작업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훈진료 기록물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2007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 대상 자료로 선정되어 이미지 스캔 및 내용 데이터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0년에 한의고전명저총서DB가 구축되면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다.²⁹⁾

기록물원본보존 문제로 김영훈 진료기록물 연구는 초기단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2014년 말까지 청강 김영훈 한의학 연구원을 설립하여 김영훈 진료기록물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에서는 김영훈 진료기록물 전시와 학술 행사를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28)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새마을 운동 시절을 설명하고자 새마을 운동 기록물을 확인하거나 당시 동영상을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29)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경희한의학 전통과 미래』, 2014, 23쪽.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김영훈 진료기록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여 중앙박물관, 한의학박물관, 경희기록관 협력으로 ‘경희 한의학 전통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다. 이 특별전은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에서 김영훈 진료기록물을 기증받은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전시였다.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은 한의과대학 건물이 신축되면 확장 이전될 예정이다. 이전된 공간에 김영훈 진료기록물 상설전시를 계획 중이다. 그리고 학술연구 확대, 기관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김영훈 진료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문 부분 제공, 제한열람, DB확장 구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³⁰⁾

(7)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소장 기록물 관련 기록정보서비스는 전시가 유일하다. 소장 기록물 및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서적³¹⁾을 참고해야한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주로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기록의 장과 고발의 장에 전시되어 있다. 기록의 장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에는 그들의 경험과 고통 그리고 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일본정부를 향한 시위활동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고발의 장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과

30) 담당 학예사는 인터뷰에서 진료기록물에 유명인사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어 전체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31) 나눔의 집 역사관후원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12.

유품 위주로 전시되어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중에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그림에는 아픈 과거를 숨기고 40년 이상을 침묵하며 살아왔던 할머니들의 감정과 기억이 담겨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현재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미술작품 영구보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8) 상주 동학교당

집장 김정선 씨는 인터뷰에서 1980년대부터 상주 동학교당과 그 기록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다.³²⁾ 그리고 연구자들이 상주 동학교당의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에 의해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후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지원으로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상주 동학교당 유물전시관은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전시실에는 동학의 종교행사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제2 전시실에서는 교주 김주희와 부교주 김낙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제3 전시실에서는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동학의 대표적인 서적과 출판에 사용된 목판 및 인쇄용구가 전시되어 있다. 서적과 목판의 경우 사본이 아닌 원본이 전시되어 있다. 원본이 전시에 활용되고 있으나 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 처리는 미비하였다. 상주 동학교당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전시되어 있으나 아직 체계를 잡지 못했다.

32) 집장 김정선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경상북도 및 상주시는 기록물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김정선 씨가 지속적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상주 동학교당과 기록물의 중요성을 설명한 끝에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림 2〉 상주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전시모습



방문 당시 국가기록원의 지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초기 작업으로 목록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목록작업 완료 후에는 기록정보서비스 및 원본 기록물의 보존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집장 김정선 씨는 상주 동학교당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상주 동학교당의 존재를 일반에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상주동학교당의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동학연구를 위한 기록물 열람과 전시를 기록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동학연구를 목적으로 연 5~10회 정도로 연구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면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집장 김정선 씨가 직접 전시 안내를 하고 있었다. 2013년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³³⁾ 경상북도에서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³⁴⁾ 아울러 상주동학교당 이야기를 다룬 기획기사가 일간지에 연재

33) 안동MBC뉴스, 「상주 동학교당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013.12.30. <http://www.youtube.com/watch?v=74BX9J7nQxU>

34) 경북도민일보,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2014.8.12.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01>

되면서,³⁵⁾ 방문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9) 한국춤문화자료원

현재 한국춤문화자료원의 김천홍컬렉션은 국립국악원에 기증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김천홍컬렉션의 자료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춤과 음악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 생전 고인이 사용하던 물품들이다. 춤에 관한 자료들 중 특징적인 것은 1950년대부터 개최한 김천홍 무용발표회 관련 기록물과 김천홍이 육필로 직접 기록한 궁중정재 무보들이다.³⁶⁾ 국가기록원은 한국춤문화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김천홍컬렉션 중에서 단행본과 같은 문헌자료를 제외한 춤관련기록물 2,400여 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는 DB검색, 학술연구제공, 특별전시, 주제 관련 출판이다. 김천홍의 생애와 예술작품을 홍보하는 것이 기록정보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다.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는 김천홍 유족에게서 김천홍 춤기록물을 기탁 받은 후 2008년 7월부터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에 착수하였다.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00여 점이 DB로 구축되었고, 이것은 2009년 1월부터 한국춤문화자료원 홈페이지 검색 창에 ‘김천홍 컬렉션’으로 서비스되고 있다.³⁷⁾

35) 한국일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2014년 10월부터 “변경의 동학-상주동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당시 상주 동학교도들의 생활과 기록물에 얽힌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http://hankookilbo.com/v/a8c06297511544aea9fc1ac73c574b1>

36) 유시현·권혜경·김현주·최해리, 「무용가 개인컬렉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출처료 분류체계 연구-김천홍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7호, 한국무용기록학회, 2009, 123쪽.

37) 신상미, 「조선의 마지막 무동: 심소 김천홍 선생의 무악인생,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다」, 『기록인』 26호, 국가기록원, 2014, 60쪽.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구축한 DB는 춤기록물 전문 온라인 검색시스템 개발로 열람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춤문화자료원 홈페이지³⁸⁾를 통해 검색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DB는 김천홍이라는 특정 인물의 생애와 예술을 바탕으로 설계된, 즉 김천홍컬렉션에 최적화된 시스템인 만큼 모든 춤자료를 분류, 검색할 수 있는 일반화된 시스템은 아니다.³⁹⁾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는 현재 구축된 검색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목록과 분류 및 정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자가 검색목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 사용방법이나 검색어 제시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그림 3〉 김천홍 디지털 춤 아카이브 검색화면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천홍 컬렉션 열람 목적은 크

38) <http://www.kdrc.or.kr/>

39) 유시현 · 권혜경 · 김현주 · 최해리, 앞의 글, 2009.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근현대 무용사 관련 연구자들로 김천홍컬렉션 소장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는 아카이빙 전문가 또는 아카이브 기관방문자들로 공연예술분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체계와 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다.⁴⁰⁾

김천홍 춤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와 창작이 이루어졌었다. 2012년 8월에는 김천홍의 5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특별전시회, 학술세미나, 복원공연을 진행하였다. 김천홍의 창작무용극 〈처용랑〉에 대한 복원공연 계획은 한국춤문화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김천홍 춤 기록물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김천홍의 육필 무보기록물을 비롯하여 김천홍의 구술채록문, 자서전, 당시의 신문기사와 신문에 실린 사진, 당시 함께 활동한 이들의 기억 등을 수집하여 취합하고 활용하여 복원이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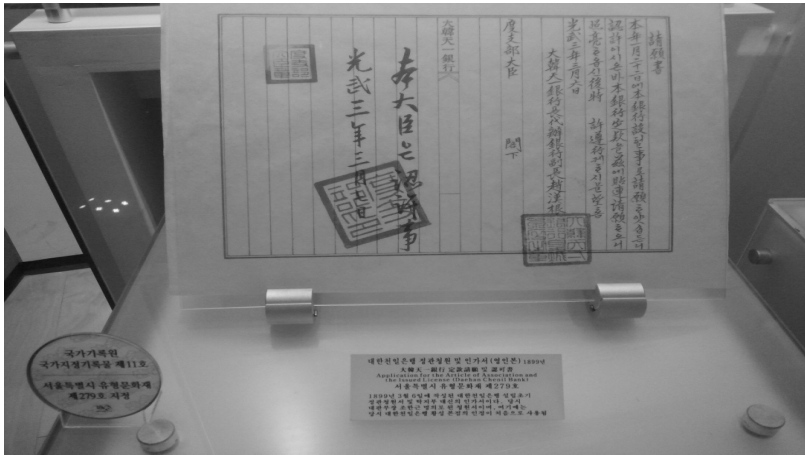
(10)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는 은행사 학술연구의 확대, 우리은행 홍보를 목적으로 원문 제공, 전시 등을 기록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이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을 대표하는 기록물인 만큼 역사관 초입인 ‘근대은행의 출현’ 섹션에 넓은 공간을 할애하여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을 대한천일은행의 창립, 업무, 구성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는 전시 기록물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표식을 함께 하고 있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해당 전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임을 알고 있다.

40) 윤지현, 「춤기록화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춤문화자료원의 김천홍 컬렉션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0-4호, 대한무용학회, 2012, 71쪽.

〈그림 4〉 대한천일은행 정관청원 및 인가서(영인본)



대한천일은행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연구자도 적은 편이다.⁴¹⁾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는 기록물 보존을 위해 원본열람을 제공하지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분야 학술연구 연구자들에게는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의 이미지파일을 제공하고 있다.⁴²⁾ 우리은행 은행사

41)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한천일은행 관련 기록물을 바탕으로 대한천일은행에 관해 진행된 연구 결과물은 단행본 1권, 논문 9편이며 다음과 같다. 이승렬, 『제국과 상인』, 역사비평사, 2007; 김윤희, 「1899년 대한천일은행의 설립배경과 목적 - 서울지역 금융환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6호, 국사편찬위원회, 2000; 김윤희,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 대한천일은행 및 대자본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김윤희, 「한말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 상업신용의 형성: 조직운영과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5-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도면희,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금융기관」, 『국사관논총』 77호,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승렬, 「한말 일제초기 대한천일은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이승렬, 「광무정권의 화폐·금융정책과 대한천일은행의 영업」, 『한국사연구』 123호, 한국사연구회, 2003; 이승렬, 「한말 은행가 집단의 형성과 광무정권 - 대한천일은행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이승렬, 「한말 일제하 경성의 은행가 조진태·백완혁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6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6.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어린이 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에서 ‘역사 속 우리은행의 역할’을 통해 대한천일은행과 관련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전시, 교육프로그램, 학술연구를 위한 원문 사진 제공 등의 기록정보서비스가 기업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는 기록물의 보존상태, 개인정보노출 우려, 저작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제한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처가 기업에 소속된 만큼 보안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소장기록물의 전체 목록 작업만이 끝난 상황이다. 근·현대 은행사 연구의 확장과 우리은행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향후 DB구축, 해당 교육프로그램 추가 개설, 관련 주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11) 활용현황 정리

지금까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일반현황과 국가지정기록물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소장처의 국가지정기록물 활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면 <표 3>⁴³⁾과 같다.

42) 조기갑, 「대한제국기 개성상인의 대한천일은행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4쪽. 검토한 사료는 현재,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은행사박물관은 각 사료를 사진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확인받아 사진파일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43)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담당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를 대신하여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답사 및 관련 문헌조사로 해당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3〉 소장처의 국가지정기록물 포함 소장기록물 관련 활용 및 향후계획

소장처	국가지정기록물	정보화 정도	활용	향후계획
고려대학교 기록자료실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 목록 - DB구축(디지털화 포함)	- DB 검색 - 학술연구제공 - 전시	- 없음
	안재홍, 미군정민정장관 문서	- 디지털아카이브	- 출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 목록 - 디지털화(진행중)	- 학술연구제공 - 원문제공(일부)	- 콘텐츠(연구자대상) - 원문제공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	- MF촬영(진행중)	- 전시	- 열람
한글학회	조선말큰사전 편찬 원고	- 디지털화(외부제공)	- 전시(외부기관)	- 없음
도산안창호기념관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 목록 - 디지털화(진행중) - DB구축(엑셀)	- 학술연구제공 - 출판	- DB구축 - 열람 서비스 - 관련 교육프로그램 - 기록정보콘텐츠 - 등록문화재 등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 목록 - 디지털화 완료 - DB구축 - DB관리시스템	- DB검색 - 학술연구제공 - 전시 - 교육프로그램(일부) - 원문제공(일부)	- 역사관 확장 - 원문제공 확대 - 자료관리시스템 확장 - 열람 서비스 - 기록정보콘텐츠 - 전용 교육프로그램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 디지털화(일부) - 목록 - DB구축(엑셀)	- 학술연구제공 - 전시	- DB구축 확장 - 열람서비스 - 원문제공서비스 - MF촬영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	- 미확인	- 전시 - 출판 - 학술연구	- 유품전시관 건립 -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상주 동학교당	상주동학교당 기록물	- 목록(진행중)	- 학술연구제공 - 전시	- 기념관 확장 - DB구축 - 원문제공서비스
한국춤문화자료원	심소 김천흥 전통 예술 관련 기록물	- 목록 - 디지털화(일부) - DB구축(일부)	- 검색서비스 - 학술연구제공 - 특별전시 - 출판 - 공연복원 및 시연	- 기념관 건립 - 교육프로그램 - 원문제공서비스 - DB 추가구축 - 기록정보콘텐츠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 목록	- 학술연구제공 - 전시 - 교육프로그램(일부)	- 기록정보콘텐츠 - 전용 교육프로그램 - DB구축

전체 현황을 정리해본 결과, 각 소장처의 국가지정기록물 포함 소장 기록물 정보화 및 기록정보서비스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소장처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소장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었거나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그리고 소장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었다. 소장처 담당자들은 인터뷰에서 소장기록물 정보화의 목적이 기록정보서비스 및 여타 활용에 있음을 강조했다.

전시는 오프라인으로 대중들이 기록물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이며, 소장처를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이다. 대부분 소장처는 전시를 기록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공연예술은 일회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 그 자체는 보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현장을 기록한 다양한 기록물들은 비록 불안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창작이나 연구를 위한 재현의 도구로서 예술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⁴⁴⁾ 그 예시로 한국춤문화자료원은 소장 기록물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012년에 김천홍 선생 5주기 추모문화제를 기념하여 김천홍 기록물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김천홍이 생전에 창작한 무용극인 〈처용량〉을 재현하였다. 무용 예술의 경우 재연과 예술적인 가치를 눈앞에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춤문화자료원의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계속해서 재창출해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기록물은 그 시대를 보여주어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해외에는 새마을 운동 홍보, 내부적으로는 교육용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소장처의 여건에 따라 실제 구현되는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보존만이 아닌 지속적인 기록정보서비스 및 여타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장처에서 기록정보서비스 및 여타활용에

44) 이호신,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13, 266쪽.

대한 향후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자체 여건으로 이를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량의 소장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고 활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만큼 소장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계획과 지원이 없다면 소장처에서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관리·활용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⁵⁾ 이것은 민간기록문화의 정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3)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효과

2007년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총 11회의 국가지정기록물이 지정되었다.(〈표 1〉 참조)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소장 기관에 지원을 한 후, 각 소장처에서 느끼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가기록원 지원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효과

소장처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 희망	국가기록원 지원	지정효과 ⁴⁶⁾
고려대학교 기록자료실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없음	-보존용품	-없음
	안재홍, 미군정민정장관 문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디지털화	-디지털화 (일부)	-없음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	-M/F촬영 -DB구축	-MF촬영(일부) -보존용품 -기록물 정리	
한글학회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보존시설 설치	-목록 -디지털화 -탈산처리 -보존용품	-언론보도

45)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한국출문화자료원의 여건이 좋지 못해 김천홍 기록물에 대한 위탁기간을 2014년 12월 에 만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인들도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싶지만 연구자들이 순수 연구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만든 단체인 만큼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못하다고 언급했다.

도산안창호기념관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디지털화 -보존시설 개선 -목록	-디지털화 (일부) -기록물 정리 -보존용품	-없음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DB 구축 -디지털화	-기록물 복원 -기록물 복제	-없음
경희대학교 한의학 역사박물관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	-MF촬영 -보존용품	-보존용품(예정)	-관람객 증가 -연구관심 증가
나눔의집일본군·위 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관련기록물	-보존시설 개선 -서고관련 지킴	-미정	-미확인
상주 동학교당	상주동학교당 기록물	-보존처리	-목록(진행) -DB 구축(예정)	-관람객 증가 -학술연구방문 증가 -언론보도 증가
한국한국춤문화사 료원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 련 기록물	-DB 확장 -추가목록정리	-보존용품(예정)	-없음
우리은행 은행사박 물관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 계 관련 기록물	-기록물 복원	-미정	-관람객 증가 -학술연구방문 증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임을 인정받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장처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반대로 한계점은 크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장처의 국가지정기록물 보존 또는 활용에 대한 희망사항과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또는 소속기관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몇 소장처를 제외하면, 소장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에 각 소장처는 국가기록원의 지원에 기대가 크지만 국가기록원의 지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의 지원은 주로 보존용품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46)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후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 및 관련 주제에 일반의 관심이 증가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소장처의 담당자 설문 조사 결과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각 소장처 담당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방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소장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국가기록원의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담당자는 많지 않았다. 소장처에서 지원이 시급한 부분에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았다 해도 ‘상징적’ 수준 이거나 갑작스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2009년 처음 지정제의를 받았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정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과 도산안창호기념관의 경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지원은 받았지만 지극히 ‘상징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별다른 논의 없이 지원이 중단되어 나머지 부분은 소장처가 부담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의 소장처 지원은 도산안창호기념관 이후에는 폭이 크지 않거나 없는 수준이다. 2011년 전까지는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 폭이 넓은 편이었다. 2011년 이후 국가기록원은 ‘중요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관리 강화’를 진행했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담당인력 및 예산의 증가는 없었다. 또한 소장처 담당자는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있지만 장기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지침제공이 전무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운영규정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안전한 보호 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및 표준모델을 제공하게 되어있다.⁴⁷⁾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지원은 초기 지정된 민간기록물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원은 없으며 기록물 보존을 위한 일부 물품지원 수준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처가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가장 긴급한 부분을 지원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 및 소장처를 위한 장기계획이 동

47)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3항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민간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번호 등 식별 번호 체계, 2. 민간기록물의 자체 분류 및 검색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3. 민간기록물의 자체 보존서고 관리를 위한 서고배열 체계, 4. 민간기록물의 편철방법 및 보존상자 편성체계, 5. 민간기록물의 마이크로필름 수록작업 표준, 6. 민간기록물의 스캐닝 파일 표준포맷 등.

반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으로 국가지정기록물과 소장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새롭게 생기지 않았다. 기록물은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보다 활용되었을 때 가치가 더욱 증가한다. 기록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기록물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없다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의미가 없다.⁴⁸⁾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해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관리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을 후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장처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을 하나의 '명예'정도로만 여긴다면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문화되거나 전시행정의 하나로 남게 될 위험이 있다.

4.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제언

1) 국가지정기록물 선정 대상 및 과정의 다원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취지는 민간에 흩어져있는 공공기록물 수집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안재홍 민정장관문서,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등의 성격은 공공기록물에 가깝다⁴⁹⁾. 국가기록원에서 이 기록물을 수집한다면 정부 수립초기 공공영역의 결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수집대상으로 삼았지만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 국가

48)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호, 한국기록학회, 2008, 286쪽.

49) 현재 소유권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록물로 취급된다.

지정기록물 지정제도 초기에는 회수되지 못한 유출기록물을 소장자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가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지정된 기록물의 성격이 공공기록물에 가까웠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기존에 지정된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위안부’관련 기록물을 보완하여 하나의 컬렉션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이 구성되어 다양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환기의 필요성과 여성가족부 및 문화재청과의 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이 더 크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수집의 보완 측면 또는 해당 소장처가 필요에 의해 국가기록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전에 조사된 후보군 안에서 진행되거나 외부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이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정대상으로 거론되는 기록물의 성격은 한정적일 수 있다. 다행히 국가지정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치, 경제, 종교, 의학, 예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가지정기록물은 국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보존 및 지식정보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정된 민간기록물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민간기록물 중에서도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기록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물이 지정·관리 및 지식정보화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보완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수록내용을 평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예·대중오락, 문학·예술, 스포츠, 학문 및 과학기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규정에 명시된 대상들 또한 당시 사회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온전히 민간영역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문화재지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대안은 선별대상 및 수록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선별대상 및 수록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사회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과 감정, 의식 등 대중의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열린 관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화된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정보와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가지정기록물 선별 방식으로는 대중의 사회문화 각 영역에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선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별과정에서 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공론장 형성이 필요하다.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민간기록물 정보를 얻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좀 더 발전된 정보와 의견이 형성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민간기록물 선별이 가능할 것이다. 추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다면 각 영역권별로 별도의 협의 구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민간기록물까지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지원 지향

(1) 활용을 바탕으로 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 운용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수집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민간기록물 관련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제도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 사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초점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에 맞춰있다. 지정 이후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방향 고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하의 연구에서도 현 기록물관리법이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변동사항 관리,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수집’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와 활용에 관한 내용들의 유기적인 관계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론 동 법률시행령과 동법률시행규칙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⁵⁰⁾

조혜민의 연구에서도 국가지정기록물은 수집이 불가능한 민간기록물에 한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활용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⁵¹⁾ 국가지정기록물 제6호로 지정된 새마을 운동 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새마을 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 기록물 기증을 제의했었다.⁵²⁾ 새마을 운동은 한국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동의 진행도 정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9년에 ‘국가발전’ 관련 민간기록물에 대해 기획수집을 추진하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로 수집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하며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기록물의 활용을 전제로 대상 선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추후에 관련된 주제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에 대한 고려가

50) 김정하, 「한국의 국가기록물관리와 역사연구-「공공기록물관리법」(2007)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90호, 대구사학회, 2008, 300쪽.

51) 조혜민, 「국가지정기록물제도의 현황과 전문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2009, 28쪽.

52) 새마을 중앙회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기증을 제의했으나 새마을 중앙회에서는 사본을 소장하는 것에 반대하여 국가기록원 측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추후 컬렉션 형태처럼 연관된 주제로 지정되어 기존에 지정된 기록물에서 결락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경우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외에 같은 성격을 지닌 소장처의 기록물을 지정함으로써 통합적인 관리 및 서로의 결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하나의 일본군‘위안부’ 컬렉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할 때 소장처의 소장 기록물 활용계획과 국가기록원이 이것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과 한글학회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해 추가적인 활용계획이 없다. 특히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유진오 제언헌법초고와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해제집을 출간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고려대학교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자체적인 기록물 보존환경과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지원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글학회는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에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당 민간기록물이 국가적으로 가지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소장처의 활용계획과 협조 의사가 없다면 소장처와 해당 기록물에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할 뿐이다. 그리고 소장처의 기록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정보서비스나 여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도 협조적일지 의문이다. 새마을 운동 기록물처럼 이미 공공기관에서 대규모의 지원을 받았거나 계획을 진행 중인 소장처의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규모 지원으로 활용기반을 마련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소장 중인 새마을 운동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명예’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면서도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여 보존과 활용

으로 이어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2) 민간기록관리기관의 역량 증진 지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및 여타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소장처의 기록관리 및 활용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기록물보존지원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장처는 자신들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고 기관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기록정보서비스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소장처에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수용한 것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국가기록원의 지원방향이 소장처의 구체적인 필요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소장처 담당자들에게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소장처의 역량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소장처와 기록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소장처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기록문화 진흥과도 연결된다. 더 나아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을 법률 체계로 등록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⁵³⁾ 국가기록원의 소장처에 대한 지원은 디지털화 또는 보존 지원 외에도 기록물의 관리·활용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간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영역의 보존시설이나 전체적인 보존환경은 자체적으로 완벽한 여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공공영역에서도 지방

53)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호, 한국기록학회, 2012, 21쪽.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기록원이 각 소장처의 보존환경에 대해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리적인 시설 지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 소장처의 필요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민간영역 자체에서 기록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지원을 통해 소장처에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가치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킬 수 있다. 각 소장처는 국가기록원이 단기적인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히 보존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보존, 분류, 관리, DB구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5. 맺음말

한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는데 있어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은 서로 엮이며 보완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만으로 당시 사회상을 보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기록관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퇴행의 길을 걸어왔다. 공공영역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록물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어 후대에 전승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07년에 개정된 현 기록물관리법을 통해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지정 및 관여 범위는 확장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상당한 격변기를 거친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때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정제도가 운용되면서도 대중에게 국가지정기록물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식정보화하는 것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특별전시와 일부 온라

인전시 제공 외에는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또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근했을 때 해당 기록물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국가지정기록물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소장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소장처에서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소장기록물의 기록정보서비스 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무엇보다 국가지정기록물 선정 대상 및 과정의 다원화, 보존·관리에서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민간기록물 수집 보완차원에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다. 국가지정기록물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 및 활용할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수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장처에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을 법률 체계로 등록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진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장처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소장 기록물의 정보화를 통해 소장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정은 결국 후대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줄 것이냐로 귀결된다. 기록물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영역이 해당 기록물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주체이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가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민간기록문화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 Study on Management Present and Improvements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Choi, Jae-Ho · Lee Young-Hak

This study is on management present and improvements on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support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changes of record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consideration that such records are worth preserving permanently nationally among records acquired by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is system i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established systematic foundation to hand down by informatizing historic private records which are in danger to be lost or damaged due to lack of proper care.

However, compared to the number of designated records, the information that could be practically drawn from such records are limited. This triggered this study to be launched. National Archive sometimes promotes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Ye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offering access of user to national designated records are very rare.

I conducted survey and interview of managers, field research, and documentary research of 10 records holding institution that keeps national designated records currently. I considered that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can be figured out minutely

through these research. As a result of such research, most of the records holding institutions offered display as their leas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The objective of records informatization was to utilize the records. Also further plans on information service related to records and various utilization were suggested. records holding institution manager did not give positive answer on effect of designating national designated record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rchive. Support to National Archive only focused on preservation. For national designated records holding institution designated after 2011 were not getting proper support. In addition, National Archive's support rarely met records holding institution's need. In such circumstances, things to consider for improvements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is as following.

First, designation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should be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record. Each records holding institution's willingness to utilize corresponding records and National Archive's ability to draw the willingness out should be considered. Also, it shouldn't be left as mere complementary policy of National Archive's selecting policy.

Second, for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to be managed permanently, it should be changed as the system that supports enhancement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The aim should point to the direction where private can manage and preserve the records on their own.

Third, There needs to be changes on the subject and process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designation. National designated record is the record that was considered valuable by the government among private records. Thus, such records should be the best one to show private field. Accordingly, records that represent contemporary society and include

various states and contents should be chosen to be designated. Moreover, public discussion be formed by citizens and related professionals in order to properly select the record.

Key words :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Private Record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of Korea